

민주, 오염수 시찰단에 “검증 없는 ‘3無 감감’ 시찰” 지적

이재명 “검증 필요한데 尹, 생각 없어 보여”
박광온 “국민 보고해야...국회 출석 적극 검토”
정청래 “한국만 방출 들러리, 공범될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실질적 검증도 없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3無 감감’ 시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국회에 출석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無(無) 감감’ 시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 이런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인다”며 “시찰단 명단은 꼭꼭 숨겨놨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시찰을 진행할 경우 결과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 얘기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이번 현장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오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의 심리적 정신승리가 대단하다. 이러니 웃기지도 않는 ‘G8’ 운운하는 것이다. G7은 들어봤어도 G8은 또 뭐냐. G7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공동성명서도 빠졌다. 한국만 들러리, 공범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고 양질의 물이라면 기시다 총리는 이걸 후쿠시마표 오염수생수로 미국에 수출하라. 왜 그렇게 깨끗한 물, 아까운 물을 바다에 버려려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자민당의 형제당인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좋다는 영국사람을 왜 불러서 선전, 선동, 홍보하나. 윤석열 정권, 정신차려라”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정부 시찰단이 시료 채취도 못하고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현장과 자

료에만 의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 접근을 하고 신뢰할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냐”라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듯이 우리 정부가 보낸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용당할 게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굳이 시찰단을 보낸 이유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설명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시찰단이 일본이 제공하는 틀 안에서 묻지마 관광을 떠났다. 알다 전 국민의힘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초청 인사가 후쿠시마 물 10(리터)를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성일종 의원 역시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를 과거 사드 괴담이나 광우병 괴담과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담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일본에 가서 오염수 시음행사를 하는 건 어떤가”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물 10를 원샷하고 오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응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21세기판 신사유람단에 불과하다. 잘 구경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보탰다.

최이슬기자

김승남 의원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소속인 육군은 3.3명, 해군은 9.5명, 공군은 11.0명으로 산림청보다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나 많았다. 이처럼 헬기 정비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비사들은 교대 인력 부족

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하루 16시간 가까이 일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비사의 피로가 누적되면, 정비사의 건강은 물론, 헬기 정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대형 헬기는 15시간, 대형 및 중형 헬기는 50시간 이상 비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헬기 정비 업무의 특성상 산발 발생 후 213시간 만에 진화된 울진·삼척 산불처럼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기 정비사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산발 진화 현장에 상주하며 불철주야 근무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건수가 2016년 391건에서 2022년 75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산발 피해 면적은 2016년 378ha에서 2022년 2만 4,797ha로 무려 65배나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발 진화에 필수적인 산림 헬기는 물론, 산림 헬기 정비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산림헬기 정비인력 부족으로 산발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력 확보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발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평가 및 분석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 산발방지 연도별 대책’에 반영하고, 이를 지역 산발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다음 연도 지역 산발방지 연도별 대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산불이 일상화, 대형화되면서 산발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 헬기의 정비인력의 업무량이 급증했다”면서 “산림청이 산림 헬기 정비인력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기 1대당 2명 이상의 적정한 정비인력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담양군의의회 이기범 의원 ‘5분 자유발언’

제319회 담양군의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발언



담양군의의회 이기범 의원은 지난 18일 제319회 담양군의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기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행

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 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길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